

□ 정부시책 및 동향 □

## 산업자원부, 對日전력기자재 수출지원 강화

정부는 최근의 엔고를 대일수출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실버산업·전력기자재·건축자재를 3대 유망분야로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본 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버산업, 전력기자재, 건축자재의 대일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출촉진단 파견,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3개 유망 분야는 최근 엔고 현상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반응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본 무역관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선정됐다. 산자부는 이들 품목의 대일 수출을 위해 분야별 수출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출기업 조직화 및 공동 시장 진출, 일본어 전용 인터넷사이트 개설, 디자인 개발 및 기술 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이들 3대 분야의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시장별 무역여건 변화를 파악해 구체적인 시장별 수출촉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전력기자재 분야

일본의 전력기자재 연간 수요는 3조6천억엔이며 주요 품목인 퓨즈, 개폐기, 커넥터, 배전반, 케이블 등은 수입 시장 규모가 막대하다. 전력기자재의 경우 전력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규진출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회사별로 납품 기준을 정해 놓고 공급 회사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일본 기업을 경유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시장은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전력회사의 설비투자계획도 385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산자부는 전기공업진흥회내 '대일중전기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위한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와 상품정보를 수록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일본 전력회사 구매담당자를 초청, 수출지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대토론회 개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기업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산업자원부는 기계공업진흥회 대강당에서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 150여명의 주요 업종별 단체장, 관련업계 임직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소재산업 대토론회'를 열고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계, 자동차, 전자, 금속, 화학 등 5대 핵심부품소재산업별로 중점개발대상 및 차세대기술을 선정해 정부가용재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인프라, 신제품개발사업 등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은 1조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의 차세대 기술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공동연구시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업계의 독자적인 판매활동 활성화 일환으로 부품판매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반기금에서 부품

판매전문회사 설립비용을 용자,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글로벌 소싱 추세에 대응, 부품소재업체가 전문화, 대형화하도록 하기 위해 합병, 설비통합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중소기업요건에 대한 병행주의(종업원과 총액기준 동시 충족)를 택일주의(종업원과 자산총액기준 가운데 택일)로 전환하고 현행 세법상 2년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중소기업 기본법상 유예기간인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품소재업체의 공용화,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과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책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모듈화 추세에 대비, 부품업체들의 자체 설계기술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차개발시 모듈 단위의 완성차·부품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다.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스타 컴퍼니(Star Company) 제도'를 도입, 시행해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

금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도 우대 지원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개발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 전기산업 경쟁체제도입

전기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력시장의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지난 6일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달중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빠른 시일내 정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과를 가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반전기사업자(한전)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구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누구든지 전기사업을 할 수 있게 하되 구조개편 진행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전기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키로했다. 아울러 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을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전력시장에서 발전원가 및 시장비용을 고려한 전기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시행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계측기기 및 생산기계의 정밀·정확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교정제도가 전면 개편, 이달부터 운영된다.

5일 산업자원부는 최근 무역상 기술장벽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체결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능력 및 신뢰도 확인이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규정 및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측정의 정밀도 향상 및 유지에 관한 제도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는 것. 과거에는 기관을 지정하는 주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문서관리, 품질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있어 객관

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됐다.

## 산업자원부, 수출미수금 회수 위한 구체법안 마련 계획

회수되지 않는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기업은 앞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이영우)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수출미수금 해결을 위해 수출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미회수 대외채권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출보험공사는 미회수 채권에 대해 공사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수출보험 기관들의 채권 회수 정보 공유가 가능, 미회수 채권협상 창구로서 공사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출보험에 부보가 안된 대외채권도 공사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끝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채권 회수촉진을 위한 협약(가칭)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는 공사 관계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대외채권회수위원회를 설치, 관련업체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채권보유업체를 간사업체로 선정해 채권 회수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협상대상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환거래 제한과 송금불능 등으로 인한 비상위험 및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대외채권 △수출보험에 부보되지 않았지만 업체의 요청이 있고 공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수수료 수준에 대해 검토작업 중이며 수출보험기금으로 공사가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미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번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수출보험법이 입법 예고돼 있어 법안개정 및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예산팀 김기만 과장은 "5대 대기업의 경우 추심기관을 통해 자체 회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30대 기업들만해도 채권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

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중에 있다”며 “시행이 확실시 되는 만큼 채권 회수 방안이 막막한 중소기업 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초 이란이 외환부족 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을 때 미회수 채권 259억 4700만원에 대해 다각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펼친 결과 원금은 물론 66억원 상당의 이자까지 회수했으며 현재 6억원 가량의 원금 만을 남겨놓고 있다.

##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오는 2001년 10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 법)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 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PL법 시행시기에 대해 산업 자원부와 논의한 결과를 이와같이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지 난 1일 밝혔다.

PL법은 소비자가 구입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 해주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 상해야 한다. 이 법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 편화돼 있고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 국에서도 도입한 상태다.

### ▲ 제조물책임(PL)법 입법과 시행 시기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구 분	PL 대응 기반 조성	PL 대응 시스템 정립	PL 대응 시스템 확립
대 응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 TFFT의 구성</li> <li>· 제품안전성 Test 실시</li> <li>· PL교육 및 홍보(전사원)</li> <li>· PL위원회 운영·지원</li> <li>· PL입법 동향 분석</li> <li>· PL대응 시스템의 구축</li> <li>· 클레임 전담부서 구성</li> <li>· 관련부서의 Feed Back</li> <li>· 안전사고 정보분석</li> <li>· 안전성 기준설계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 종합매뉴얼 제작</li> <li>· 전사적 PL 정보망 구축</li> <li>· PL 소송의 분석·대응</li> <li>· 부서별 예방 매뉴얼 작성</li> <li>· 문서관리시스템의 정비</li> <li>· A/S PL 매뉴얼 제작</li> <li>· A/S 직원 PL 교육·훈련</li> <li>· 클레임 전담부서 교육</li> <li>· PL 감사 시스템의 구축</li> <li>· 각국 안전기준 test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 Claim 원인 분석</li> <li>· PL 소송시 방어전략 수립</li> <li>· PL 감사결과 업그레이드</li> <li>· 문서관리 시스템 표준화</li> <li>· 각국 안전규격의 획득</li> <li>· PL 예방 부서별 임무정립</li> <li>· 전사적 PL 예방 시스템 구축</li> <li>· PL 소송시 조사·처리</li> <li>· 소비자단체 등 시장정보 조사</li> <li>· PL 보험의 가입</li> </ul>

이번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공포되므로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이와같이 못박았다.

산자부는 기업들 부담을 감안 2003년부터 시행을 주장했고 재경부는 2001년부터로 팽팽히 맞서 왔으나 최근 실무협의에서 최종 결

정했다.

재경부는 PL법 필요성에 대해 △수출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이미 보상을 해주는 반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차별문제를 해결 △소비자 안전을 감안하는 제품 개발 주력 △PL관련 보험 가입시 기업부담 경감 등을 들었다.

## 중소기업청,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에 한국산업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 지원한다.

지난 9일 중기청은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칠성정밀(주)·범우화학공업(주) 등 5개 업체에 대해 산은이 특별자금 11억1천억원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키로 한 업체들은 중기청이 '9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경쟁력 평가사업'에 의해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으로 선정된 423개 업체중 자금지원을 요청해 온 33개 대상으로 심사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영중인 특별펀드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은 중기청 기술정책과에 신청해야 한다. 산은은 중기청 추천을 받은 기업의 담보제공 능력 등 기본심사를 거쳐 10억원 한도에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 중기청 기술정책과 042-481-4438〉